

#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 퇴진이 추모다 윤

이태원 참사 원인에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이 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제 모두의 슬픔과 충격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간단한 통행 통제와 구급 대비만 했더라면 이 대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적어도 참사 4시간 전부터 이어진 신고자들의 절박한 SOS를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막을 수 있었다.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는 더 열받게 만든다. 참사 이후 윤석열의 대응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단속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 이 민간 사찰 기밀 보고서는 유가족·언론·사회운동단체 등의 동향 파악 등을 꼼꼼히 분석해 정부 책임론 확산 방지책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아마 대통령실 보고용이었을 것이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커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대비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규정한다.

정부 여당과 우파언론들은 ‘순수한 애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비난의 핏대를 세운다. 하지만, **정부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사회의 진정한 책임자

## 윤석열은 퇴진하라

당일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부대들의 초점은 범죄와의 전쟁(특히 마약 범죄) 수행에 있었다.

“범죄와의 전쟁”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고 윤석열이 직접 국정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특히 지지율 추락 이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은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대중의 불만이 큰 가운데 부자 세금을 감면해 주고 민영화나 연금 개악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경찰력 강화 등 권위주의적 수단을 강화해야 하는데, 바로 이를 정당화해 주는 수단이 마약과의 전쟁인 것이다.

이처럼 10월 29일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은 바로 윤석열의 우선순위가 실행에 옮겨진 것의 결과다.

가진 자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그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권위주의적으로 억누르려 한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 말이다.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는 참사 당일 경찰의 관심사가 윤석열 퇴진 집회 통제와 대통령 경비에 쏠려 있었던 것에서도 드러났다.

정부는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행정부 용어를 통일하라고 했다. 윤석열이 참가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책임 회피 용어부터 개발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간단한 교통 통제조치 거부한 정부가 사람들의 애도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극도로 정치적인 것이다. 그것도 아주 사악한 정치이다.

**무엇보다 참사 자체가 정치적인데, 그에 대한 애도가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정부 자체가 참사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법질서를 앞세운 공안과 범죄[마약]와의 전쟁) 때문이었다.

## 윤석열의 우선순위가 참사를 낳았다

경찰청이 용산경찰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꼬리 자르기 시도일 뿐이다.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는 윤석열 자신이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오프라인 포럼**

# 거듭되는 참사, 국가, 자본

**2022년 11월 16일(수) 오후 7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홍대입구역 2번 출구 3분 거리) 3**

**발제 김승주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 마르크스주**

결국 작금의 사태에 최종·최대 책임자는 정부의 수장인 윤석열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윤석열의 사과가 아니라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사과할 때는 이미 지났다. 지난 주말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추모 촛불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정부 책임이 속속 드러나도 꼬리 자르기로 면피만 하는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면피할 기회만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분노가 제약되고, 책임의 초점이 흐려질 것이다. 윤석열이 종교 행사에서 “죄송한 마음” 운운한 것을 두고, 벌써 대통령 사과라고 떠들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 유가족의 말처럼, **진정한 애도는 진상을 알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시작할 수 있다. 그 화살이 윤석열을 향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이 진정한 추모다.**

2022년 11월 11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본주의**

층 바실리오홀

의적 관점》저자



문의

010-5443-2395

youth@workersolidarity.org

인스타&페이스북 DM 가능